본 궤도 오른 '영산강 살리기' 어떻게 진행되나

2년내 본류공사 완료, 2012년 샛강 마무리

홍수대비 하구둑 배수문 2배 이상 넓혀

하수처리장 15곳·친수공간·습지 조성

22일 영산강에서 이명박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이 개최되고,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승촌보와 죽산보 등 영산강에 새로 들어설 2개의 보의 물막이 공사가 시작되는 등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본궤도에 접어들었다.

지난 6월 8일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는 이번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용수확보와 홍수조절량 증대,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등을 목표로 세부 일정에 따라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1년에는 본류 준설, 보 설치, 하천 정비 등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되고, 2012년에는 지류 정비와 댐·저수지 신·증설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량확보 및 홍수방어능력 증대=영산강에는 승촌보와 죽산보 등 보 2개가 설치되며, 농업용 저수지 14곳을 증고(제방을 높이는 사업)하는 작업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용수공급능력을 1.1억㎥가량 끌어올리게 된다.

특히 광주시 서창 인근에 길이 540m 높이 6m 규모로 설치되는 승촌보는 영산호에서 출발하는 황포돛배가 드나드는 관문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승촌보 사업은 올 하반기 물막이 공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착공돼 내년 연말이면 준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홍수방어능력을 높이기 위해 하도 0.3억㎥를 준설하고 나주에 강변저류지를 설치하는 한편 담양과 화순에 홍수조절지를 각각 새로 설치함으로써 홍수조절용량을 1.1억㎥ 증대시키게 된다.

◇하구둑 배수문 증설=영산강의 오염을 줄이고 관광레저형 뱃길을 확보하는 한편 급작스런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영산강 하구둑의 배수문이 기존의 240m에서 480m로 확대된다.

또 영암호와 영산호 간 연락수로도 기존의 15m에서 140m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영암호의 배수문도 80m에서 410m로 4배 이상 확대된다. 또한, 영산호 밑바닥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하구둑 바닥으로 바다와 호수를 잇는 지름 2.2m, 길이 2km 짜리 저층수 배제시설이 설치된다. 내년 3월께면 영산강 하구둑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사업이 착공될 전망이다.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최근 발표된 환경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2년에는 지난 2006년에 비해 영산강의 수질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영산강 인근에 15개의 하수처리장을 조성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비점오염원(도시 노면 배수나 농경지 배수와 같이 불특정한 배출경로를 통해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장소 또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관리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승촌보 인근에 아름다운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220㎞에 이르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며, 목포~광주 간 30㎞ 거리 뱃길 복원 및 3㎞에 이르는 생태습지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영산강 일대를 시·도민이 이용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최근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남에 따라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승촌보와 죽산보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패스트 트랙(fast track-실시설계·시공 동시진행)'방식으로 공사가 이뤄지며 오는 2011년 완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한 식당에서 광주·전남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주·전남 경제활성화 간담회' 도중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李 대통령 4대강 기공식 '영산강' 택한 이유는

민주 텃밭서 '4대강 반대' 정면돌파

"4대강 사업 정치논리로 좌우되어선 안돼"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광주 영산강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기공식)'에 참석, 관심을 끌었다.

희망 선포식은 22일 영산강과 금강에서 열렸고, 27일 한강과 낙동강에서도 각각 열리는 데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특별히 영산강 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4대강 사업 비판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텃밭을 공략,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풀이하고 있다.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영산강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발판으로 야당의 반대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즉, 강 살리기에 대한 지역여망을 4대강 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다.

더욱이 영산강의 경우 이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들고 나오기 전부터 영산강 살리기 또는 뱃길 복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누차 제기돼 온 상태여서 여론 활성화가 어느 지역보다 쉬운 것도 영산강 선택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희망선포식에 앞서 광주시내 한 식당에서 호남지역 기관장 및 경제, 언론계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지를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도 "영산강 살리기는 여러분의 꿈이자 대한민국의 꿈이기도 했다"면서 "그래서 저는 영산강 살리기가 가장 먼저 착수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영산강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또 4대 강 사업과 관련,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는 민주당 등 야당을 겨냥한 듯 "국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기로 한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마음은 있되 몸은 올 수 없는 형편을 매우 안타까워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행보에 지역 인사들의 반응도 주목되고 있다.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와 낙동강 사업에 비해 턱없이 적은 사업비 등 여러 가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장 영산강 사업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날 오찬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 대통령을 한껏 추켜올리면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지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인사말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G 20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을 크게 높여온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을 통해 선진일류국가의 성공한 지도자로 남기를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박 지사도 "논란도 있지만 영산강 만큼은 오랫동안 뭔가를 하지 않으면 강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다 함께 갖고 있었다"면서 "이 대통령이 큰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편하게 살면서 미래 희망을 갖고 사는 시대를 열어가길 기원한다"고 덕담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해외인사 영상메시지·풍물 놀이·4대강 합수식…

영산강 살리기 기공식 이색행사 '눈길'

22일 광주시 남구 승촌동 영산강사업 6공구 승촌보 공사현장에서 열린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은 기존 기공식과 달리 이색적인 문화행사로 치러져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아나나 티에가 람사르(RAMSAR)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주요 해외인사들이 4대 강 사업을 지구촌 기후온난화에 대비한 녹색성장 정책으로 높이 평가하는 영상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영산강 인근 광주시 남구 대촌동 주부들로 구성된 농악단의 '터다지기 풍물 길놀이'로 시작됐으며, 행사장 인근 영산강에서는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 성공을 기원하는 종이배를 띄우기도 했다.

또한, 섬진강을 포함한 4대 강에서 떠 온 강물이 자전거를 통해 공수돼 영산강에서 혼합되는 '합수식'도 진행되는 등 친환경적이고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 문화축제 행사'로 치러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영산강 살리기는 꼭 필요하지만…

민주 의원들 당론 배치 기공식 전원 불참

"영산강 살리기는 꼭 필요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반대한다."

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기공식)에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자칫 당내 이견 표출로 비쳐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 20명은 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행사 불참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산강 사업과 4대강 사업의 분리 대응을 주장해온 최인기(나주·화순) 의원은 이날 "수질 개선과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영산강 하천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이날 영산강에서 열린 4대강 사업 기공식에 이 대통령이 참석한 것에 대해 "호남 여론 분열책"이라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영산강 살리기의 불가피성을 4대강 사업의 명분으로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전체 4대강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낙동강을 제쳐두고 영산강에서 행사를 기획한 것은 호남 민심에 생색을 내기 위한 '꼼수정치'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맥락에서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치졸하고 유치한 정치적 이간질로 국가적 정책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은혜 수석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기공식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치논리로 좌우돼선 안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야말로 국가적 재앙인 4대강 사업을 정치적 논리로만 밀어붙여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4대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야당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집권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협박정치'를 하고 있다"며 "대응할 일고의 가치를 못 느낀다"고 반박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예산 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를 무시하며 국민 혈세를 맘대로 쓰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치의 사망'을 선포한 것으로, 4대강 사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